



반노동 개혁으로 번진 노란 조끼 ... 최저임금 인상이 변곡점 되나

프랑스 사회를 뒤흔드는 ‘노란 조끼(Gilet Jaunes)’ 시위가 애초 목표였던 ‘유류세 인상 저지’를 달성하고도 계속해서 그 세를 부풀리고 있다. 민심을 읽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시위대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하며 ‘대통령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노란 조끼 운동’은 국경을 넘어 벨기에, 캐나다, 이집트까지 확산됐다.

발단은 유류세 인상이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2017년 10월 유류세 인상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해당 세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는 목적이었다. 국제 유가 상승과 맞물려 최근 1년간 프랑스 유가 상승률은 23%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디젤유에 대해 세금을 인상한다는 정책은 저소득층을 거리로 떠미는 꼴이었다.

생업을 위해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대도시 외곽·농촌 지역 거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 수반이 환경오염

과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동안 이들은 매달 생계를 고심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량 사고 발생 시 착용하는 노란색 형광 조끼를 입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해 11월 17일 첫 대규모 시위에 29만 명이 집결했고 매주 토요일 계속된 시위에 누적 70만 명이 참가했다.

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 ... 마크롱 노동 개혁에까지 불통

마크롱 정부는 “유류세 철회는 없다”면서 “(시위대에) 극우·극좌단체 조직원들이 포함됐다”고 발표해 그 의미를 격하시켰다. 분노한 시위대는 파리의 상징 개선문에 ‘마크롱 퇴진’ 요구 낙서를 도배했고, 일부는 프랑스 혁명 정신의 상징인 마리안 상을 파손하기도 했다.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12월 4일 “2019년 1월로 예정된 유류세 인상을 6개월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필리프 총리는 “국민적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가 통합을 위협에 빠뜨릴 만큼의 가치 있는 세금인상은 없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상 보류 발표 직후인 12월 8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노란 조끼 시위대의 대변인 격인 벤자민 코시는 프랑스 뉴스 채널 BFM TV에 나와 “(유예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요구는 훨씬 성대하다. 더 나은 부의 분배와 소득 인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성난 민심은 높은 생활 물가와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취임 이후 공무원 감축,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교육 개혁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온 국정과제에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더욱이 마크롱 정부는 ‘부자세’라고 불리는 사회연대세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하며 연 4조원 규모의 ‘부자 감세’를 감행했고, 부동산, 주식, 보험, 사치품 등 자산 전반에 적용되던 부유세(ISF)도 부동산 한정으로 축소했다.

동시에 연금 소득자에 대한 세금과 유류세 등 저소득층을 직격하는 세금을 대해서는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노동 개혁으로 근로자의 권리는 축소하면서 세

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1%대에 그쳤고, 실업률은 9%를 넘었다. 시위대는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해 ‘마크롱 퇴진’ 구호를 외쳤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야당은 불신임 안건을 상정했다.

시위로 성취한 '최저임금 인상'

프랑스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면서 마크롱 정부가 항복을 선언했다. 지난 12월 5일 유류세 인상 계획을 전면 철회했고, 10일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 면세 확대를 약속했다. 4주째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노란 조끼 시위에 침묵을 유지하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2월 1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최저임금 월 100유로 인상 ▲초과근로에 대한 세금 폐지 ▲저소득 연금생활자에 대한 세금 인상 철회 ▲연말 보너스 지급 독려 등을 약속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에 따르면 1월부터 월 100유로(약 12만8,400원)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현행 최저임금(세전 1,498.47유로)에서 7% 가까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인상분은 전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로서는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인상이 약 26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시위대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면서 ‘부자 감세’로 비판받았던 부유세 원상복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는 프랑스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일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위대 안팎으로 지지 세력 반 토막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방송 이후 프랑스 여론은 둘로 나뉘었다.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언웨이(Opinionway)가 지난 12월 1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송 직후 ‘노란 조끼 운동을 멈춰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 ‘계속돼

야 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45%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여론조사업체 오독사(Odoxa)의 발표에 따르면 54%가 '노란 조끼 운동을 계속 해야 한다' 고 응답했고, '멈춰야 한다' 고 대답한 비율은 46%였다. 결괏값은 다소 다르지만, 프랑스인 세 명 중 두 명이 '노란 조끼 운동을 지지한다' 고 응답한 이전 결과와 비교하면 지지 여론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위 규모도 줄었다.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12월 15일 파리에서 열린 제5차 집회에 약 3,000여 명, 전국적으로 약 6만6,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계산했다. 전주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시위대 내에서도 목소리가 갈렸다. 마크롱 정부 비판 동영상을 올려 노란 조끼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자클린 무로는 시위대를 향해 '휴전' 을 요구했다. 자클린은 대통령 담화 방송 이후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로터리에서 보낼 수는 없다" 며 "우리는 이제 이 고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 말했다.

다른 리더들은 이를 거부했다. 마찬가지로 시위 영상으로 유명해진 막심 니콜은 "(이번 조치는)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 고 말했다. 벤자민 코시는 담화문에 담긴 약속이 "반쪽 짜리 조치" 라며 "마크롱 대통령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담화문 방송 이후 프랑스 내 세력은 줄어들었지만 '노란 조끼 운동' 은 국경을 넘어 유럽, 북미, 아프리카 대륙까지 확산되고 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 이웃 나라에서는 물가 상승과 빈곤 확대에 반대하며 노란 조끼를 입었고, 이라크에서는 정부의 부패 반대, 공공서비스와 일자리를 요구하며 노란조끼를 입었다. 지난 12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3번째 노란 조끼 집회가 열렸고, 뒤흐상부르 광장에 모인 100여 명이 EU 본부를 향해 행진했다.

노란 조끼, 자본주의 성공의 결과물?

전 세계로 확산하는 노란 조끼 운동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노선을 택한 서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현상' 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12월 2일 '프랑스는 심하게 균열됐다. 노란 조끼는 한 가지 징후에 불과



▲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0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하다(France is deeply fractured, Gilets jaunes are just symptom)' 라는 오피니언을 통해 "서구사회가 채택한 새로운 경제 모델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 비용은 유럽과 미국의 노동자 계급을 희생시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기고자 크리스토프 길뤼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결과(노동자 계급의 희생)는 글로벌 경제 모델의 실패가 아닌 성공의 결과" 라며 "최근 수십 년간 프랑스 경제는 계속해서 부를 늘려왔고,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부유해졌다. 문제는 같은 기간 동안 실업과 경제적 불안정, 빈곤 또한 증가했다" 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회학적 지형은 고용과 부를 큰 도시에 집중시켜 왔고, 시골, 중소도시는 점점 활력을 잃었다. 노란 조끼 운동이 발생한 곳도 고용과 부의 축적에서 소외된 도시 외곽이었다. 크리스토프 길뤼는 "유류세 인상이 노란 조끼 운동의 도화선이라고 해도 문제의 뿌리는 훨씬 깊다. 8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적·문화적 소외의 결과다" 라고 말했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 각국이 '노란 조끼' 운동에 촉각을 세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